

EAI 신년기획 한국외교 라운드테이블

향후 5년 한국의 통상정책 제언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 파고 넘기

2017년 2월

대표집필 손 열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 · 연세대학교 교수

공격적 일방주의의 대두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발 파고는 높아지고 한국이 격랑에 휩쓸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트럼프 통상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어두운 면, 즉 세계화가 일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오는 반면 특정 산업, 지역, 계층을 희생시켜왔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정치쟁점화하고 이에 대한 동조를 지지로 이끌어냄으로써 대이변을 이끌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워싱턴은 번영을 누렸지만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장은 감소했다.”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제품을 구입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도록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통상정책은 단순히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기업의 무역과 투자 환경을 지원하는 미시적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층의 회생을 위해 미국 제조업의 부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실업 축소 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주의 제도와 규범, 규칙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접근보다는 미국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양자주의 협상과 일방주의적 보복, 실적지향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s: 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를 실천하며 공공연히 중국을 제일순위 보복 대상으로 지목하고, 일본과 한국 등 미국에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으로 시정 압력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공격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 통상정책이라 부를 수 있다.

과연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론, 비관론, 신중론이 교차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은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모험에 대해 중국이 바로 응수하지 못할 상당한 세력편차가 존재하나, 경제적으로는 세력편차가 축소되고 있는 한편, 상호의존성의 증대, 국제규범/규칙의 존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대중 압박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1990년대 WTO가 성립된 이래 다자주의 무역질서가 형성되고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을 통한 경쟁적 자유화가 진전된 오늘날의 자유주의 경제질서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될 경우 대외의

- EAI는 2017년을 맞아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고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저자가 대표집필하였습니다.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향후 5년 한국의 통상정책 제언: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일방주의 파고 넘기” 979-11-87558-30-9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며 나아가 미중관계 전반의 악화와 전략적 경쟁의 심화를 가져와 한국의 안보이익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객관적 형세 판단과 함께 주요국 지도자들의 주관적 형세판단을 읽어내어 본격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3대 리스크

미중 무역갈등

트럼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첨단 제조업과 금융부문의 눈부신 성장을 가져온 반면,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일어나 제조업 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서비스 부문의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저교육, 저소득 계층이 소외되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들을 희생시키는 핵심수단으로 통상정책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선적이고도 궁극적인 공략 대상은 중국이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조작과 함께 국영기업 보조금, 중국시장의 방어벽, 노동기준, 환경 규제 미약, 기술 규제 등을 통해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막대한 대미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의 피해가 야기되므로 통상법을 발동해 강력하고 직접적인 무역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경수수지 적자 교정의 차원이 아니라 자국의 탈산업화를 촉진하여 경제력을 약화시킨다는 국익 차원의 대응이며, 나아가 중국에게 대한 패권적 지위의 약화를 저지하려는 전략적 고려를 담고 있다. 중국의 무역정책이 적대적이고 위협이라는 인식은 백악관 산하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mmission) 나바로 위원장이 무역정책의 목표로 (1) 무역의 재균형(즉, 무역역조 해소), (2) 제조업 부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미국의 종합 국력(America's comprehensive national power) 회복을 꼽은 데 잘 드러나 있다.

문제는 시진핑체제 중국의 대응이다. 유사하게도 1980년대와 90년대 초 일본은 미국의 불공정 무역 공세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면서 여러 양보를 거듭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일본이 미일동맹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비대칭적 구조 조건이 존재하였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따라서 안보적 이유로 경제적 양보를 고려해야 할 처지는 아니다. 또한 미국의 주장에는 경제논리상 여러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어 국제여론전 역시 만만치 않다. 예컨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서 보듯이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다. 또한 러스트벨트(rust belt) 제조업 쇠퇴는 무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국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보호를 위한 통상압력 역시 설득 논리가 약하다. 끝으로 WTO란 다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주의적 보복에 나설 경우 국제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 16일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보호주의를 강력히 규탄하여 중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에 서서 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를 견인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의 공세에 굴하여 당장 타협에 나서기보다는 명분론을 배경으로 장기적 경쟁 전략을 구사할 태세이다.

이렇듯 명분전을 펼치는 중국에 미국이 무차별 공세에 나설 가능성은 낮고, 중국 역시 여러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반발에 한계가 있다. 양국은 전면적 무역전쟁은 아니더라도 불공정 무역을 둘러싼 공방과 한정된 보복의 행사 등으로 제한된 갈등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상호 적응과 조정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지나친 비관론에 입각하여 대응에 부심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여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시장이 침체될 경우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분명하고, 한국이 수출한 중간재를 조립, 가공하여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중국제품에 대한 본격적 보복이 실행될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한미 양자무역 현안

한국에 대한 양자통상압력도 우려의 대상이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잘못된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에 본격적인 무역역조 시정 압력을 가할 것이라 공언하였으나, 막상 당선후 통상 어젠다에서 한국 이슈는 선순위 그



룹에 들어있지는 않다. 트럼프 통상정책의 중심 인물인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은 NAFTA 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TPP 개정과 중국 보호주의/불공정 관행 교정을 핵심 어젠다로 꼽았으며 한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입규제를 위한 조사 대상국으로 중국이 2015년 11건을 차지한 데 이어 2016년 18건으로 최다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한국도 2015년 7건, 2016년 6건을 차지한 데서 나타나듯이 인도와 더불어 주요 관찰대상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새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인 한미 FTA 이행 문제와 FTA 개정 문제는 반드시 제기될 것이다.

환율조작 문제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일방적 개입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가지를 따져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국은 첫 두 조건에 부합하고 있어 만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한국도 이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TPP 무산과 지역 무역질서의 공백

한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중대사안은 미국의 TPP 탈퇴 선언이다. 한국은 TPP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TPP를 통한 아태지역에 고수준의 개방과 통합을 지향하는 다자 무역규범과 규칙의 형성은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이런 이유로 한국은 TPP 협상에 참여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해 자국의 비대칭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양자주의에 기초한 무역협정을 새롭게 추진한다면(미일 FTA 등), 아태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치사슬(value chain) 혹은 생산네트워크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위한 메가 FTA 혹은 다자 FTA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된다.

이는 중국에 리더십 획득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은 고수준, 고품질 FTA에 가입하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

ment: RCEP)을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를 띠우는 한편 일대일로 전략으로 아시아대륙을 자국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미국우선주의의 빈사이익은 중국이 얻을 전망이다. RCEP 교섭이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서비스, 상품, 투자,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 개방 정도가 낮다는 사실은 중국이 전면적 개방/개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역내 개방무역질서와 경제통합을 주도할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RCEP은 설사 성사되더라도 지역무역질서를 주도하고 통합력을 제고하는 기제가 되기는 어렵고 FTAAP 역시 다르지 않다.

한편 일본은 TPP를 일본경제 개혁과 성장의 핵심수단으로 삼아왔고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21일 시정연설에서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공정한 규칙에 기초한 21세기형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초석”으로 TPP 추진을 언급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로 타격을 입었다. 미일동맹을 강조하는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TPP 추진에 유보적이고 경쟁국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향후 아태지역 통상질서 구축에 자국만의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요컨대, 미국의 공백을 중국 등 주요국들이 메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경학(geo-economics)적 관심 하에 상호 전략적 경쟁에 몰두하여 지역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경우 한국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증폭될 것이다.

대응전략

이러한 3대 리스크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초점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양질의 일자리 생산이라는 서로 연계된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 있다. 그런데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두 목표를 모두 실현할 수는 없으며 미국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미국 신정부는 이념적으로 자유무역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무역협정이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협정을 교묘히 위반하는 불공정 무역을 비판하는 것이다. 신 행정부 통상정책의 핵심개념은 공정무역(fair trade), 즉 보조금이나 덤핑 등으로 불공정한



경쟁에 따른 피해를 입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여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처럼 상대방과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보복이 가능한 국가는 공정무역의 명분하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일차적으로 한국 정부는, 첫째, 기존 무역협정(한미FTA)이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둘째로 기존 협정의 이행 차원에서 불공정 관행 여부를 국제규범 및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적극 시정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 한미 FTA 5년의 포괄적 대차대조표를 마련해야 한다.

한미FTA는 미국이 최근 체결한 양자협정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무역협정임을 강조하며 미국 측에 한미FTA의 포괄적인 대차대조표를 마련,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미 FTA가 다른 FTA와 달리 미국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양국의 경제관계를 심화,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한미FTA 체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을 창출하였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FTA에 대한 경제적 접근에서 벗어나 한미FTA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 측에 재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이 TPP 탈퇴를 결행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FTA가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연계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통로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신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동아시아 혹은 아태지역에 대한 제도적 연결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TPP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한미FTA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 불공정 무역 공세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호주의 경도를 지나치게 과장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공정무역’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면서 상호

공정한 물과 관행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환율, 무역 불균형, 한미FTA 등 쟁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환율개입이나 한미FTA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시정하겠다는 선제적 노력으로 불공정 무역 공세를 넘어 한국경제의 고도화, 선진화를 이끌어야 한다. 역으로, 미국이 부당한 불공정 무역 공세를 취할 때 이에 대한 대응논리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환율조작국 지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정조준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일괄 지정하여 이 사안의 정치적 의미를 제고하려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럴 경우 한국의 지정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무역과 통화 이슈를 통합적 시야에서 점검하여 정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트럼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 한국은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한미FTA 발효 5주년이므로 양국이 그간 성과와 개선 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 개정 요구는 한미FTA 재협상이 아닌 업그레이드 협상으로 정의하여 의약품 약가 산정이나 자동차 판매, 법률시장 개방 등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변화하는 이익의 균형을 찾는 협상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3.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어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 보수해야 한다.

향후 한국이 직접적으로 마주할 최대 파고는 미중 무역갈등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불공정 무역 공세에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란 명분론으로 정면 승부한다면 양국간 무역갈등의 진전으로 아태지역의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심각하게 동요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역보복 공세가 통화 등 여타 영역으로 갈등이 파급되어 통화질서의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원화 환율 변동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한국경제의 불안은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환율조작국 시비는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나아가 안보영역과



연계될 경우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더욱 곤혹스런 처지에 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미중 양국이 무역갈등을 벌이는 것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미국이 갈등을 관리, 규율하는 다자제도 건축에 재개입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한중일 FTA, RCEP 등 아시아 FTA 협상에 적극 동참하여 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조직적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제도적 통로로서 한미FTA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환기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아태지역제도에서 영향력 상실을 우려하며 머지 않아 다자질서 건축을 위한 재개입으로 선회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TPP 탈퇴를 선언하였지만, 21세기 무역정책이 국경의 통제(border control)가 아니라 초국적 공급사슬(supply chain) 혹은 생산네트워크의 확산과 원활한 작동을 위한 국경 이면(behind the border)의 규칙/규범 제정과 조정에 있다는 점에서 TPP의 기본 방향성은 적절하다. 미국이 이런 인식 하에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역내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체결참여국이 아니지만 재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미FTA를 발전시켜 가면서 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FTA 체결협상들을 품고 엮는 지역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RCEP, 한중일 FTA, TPP, 한일 FTA 등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어떤 수순으로 엮어 궁극적으로 FTAAP로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수립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중추 국가의 위치에 있으므로 한일FTA 협상의 재개는 여러모로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4. 능동적 경제외교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중 통상갈등은 단순히 무역 재균형, 기업의 이윤, 일자리 확보 등을 둘러싼 미시적 차원의 경쟁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정치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미국우선주의의 경제적 표현, 즉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격차 조정을 통해 종합국력을 신장하는 수단이다. NTC가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

업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통해 중국에 대한 본격적 공세를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과 우호국을 목표로 다양한 지정학적 접근을 펼쳐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다면적이며 적극적인 경제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도 미국과 공조 노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TPP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왔으며 2017년 일본외교 3대 기조의 하나로 능동적 경제외교를 꼽고 있다. 이렇듯 주요 국가간 치열한 경제외교가 교차하는 아태 공간에서 한국이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제외교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한국은 수출시장 확보(경제영토 확대), 기업이윤 증대, 무역 재균형 등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력을 투사하는 전통적 통상외교를 넘어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외교와 함께 안보적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외교를 포괄하는 복합 경제외교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기왕의 한국 통상외교에서 정책의 핵심 동인은 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 환경을 도와 국부를 증진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적 논리에 따른 손익 계산분석으로 통상협상을 수행해 왔다. 현 정부 들면서 조직개편으로 통상조직이 산업담당 부서로 이관된 배경도 통상협상과 이행의 일체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논리가 작용한 까닭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무역, 통화, 금융, 국방 등 모든 분야의 협상카드를 동원하여 이슈 연계를 시도하며 거래중심적 협상에 나설 것이다. 한미관계의 경우, 미국이 전통적 무역 이슈에 통화 조정, 투자 균형, 방위비 분담, 무기구입, 안보협력 등과 연계하여 나올 경우 한국 측은 보다 통합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폭넓은 경제외교의 시야로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 하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5. 경제외교의 콘트롤 타워를 수립해야 한다.

능동적 경제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상업무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과 통상이 연계되어 있는 현행 조직체계는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그 상업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좁은 의미의 통상외교 관념에 기반하고 있으나,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미 21세기 시장환경은 전통적 국제분업에 따른 국가간 무역을 넘어서 기업활동 자체가 초국경적으로 전개되면서 지리적으로 분리, 분산되어 서로 다른 생산공정과 태스크를 담당하는 생산 네트워크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런 환경에서 통상정책은 관세철폐를 넘어서 광범위한 정책 패키지 즉, 금융서비스, 투자자유화,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경쟁정책,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자유화와 효율화 등 무역-투자-서비스의 결합을 돕는 새로운 제도환경을 제공하는 협상과정이 되고 있다. 최근 FTA 협상을 보면 상품양허안보다도 재산권 보장, 원산지 규정, 자본이동, 인력이동, 경쟁정책 등이 주요한 교섭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 통화 환율 문제가 무역과 이슈 연계되어 있으며, 외교전략 이슈와 연계 역시 현저하다. 국가간 전략적 경쟁의 수단, 안보이익의 확보를 위해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추세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미중경쟁 속에서 이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고려할 때, 한국은 여러 경제부처 및 사회부처와 민간 행위자, 나아가 국가전략과 안보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자도 참여하여 공조할 수 있는 부처-횡단적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고 협상을 통솔하는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

- 라운드테이블 참가자(가나다 순)_ 손 열(연세대), 이동률(동덕여대), 이숙종(EAI), 전재성(서울대), 정 철(KIEP), 최병일(이화여대), 하영선(EAI)
- 대표집필 손 열_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 연세대학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도쿄대학교, 와세다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방문교수를 거쳤다. 주 연구 분야는 일본 및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등이다.
- 담당 및 편집_ 신영환 EAI 수석연구원
문의_02 2277 1683 (ext. 107), yhshin@eai.or.kr

